

예산 없어서...5·18 왜곡·가짜뉴스 모니터링 수개월 중단

인건비 미편성...모니터링 요원과 재계약 지난 1월 포기 이달부터 특정 사이트, 1~2주 간격 AI방식 검색 재개 "진화·교묘해진 허위사실 유포자 대응 한계...강화 돼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편향·허위 사실 인터넷 게시물을 찾아내는 모니터링 활동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단됐다. 3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인터넷 등에 게시된 민주화운동 허위사실을 확인해 삭제요청·고소·고발하는 사이버 대응 활동을 지난 1월부터 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대응 활동 예산으로 편성한 2억원 중 1억5350만원이 삭감돼 모니터링 요원

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 재계약을 포기했다. 기념재단은 남은 4650만원의 예산으로 5월길 안내와 인공지능(AI) 업체에 모니터링 용역을 의뢰해 이달부터 1~2주 간격으로 허위사실 작성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재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검색은 왜곡·편향·가짜뉴스 특정 사이트 3곳만 가능하고 검색에 필요한

단어도 '5·18 폭동·북한군·가짜유포자·지역비하 단어'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5·18 왜곡은 해외 사이트를 통한 댓글작성, 인터넷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산하며 교묘해지고 있어 외주용역을 통한 가짜뉴스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이버 대응 활동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념재단은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 폭동, 지역 비하 등의 가짜뉴스가 확산되자 사이버 대응단을 구성하고 2019년부터 매일 모니터링했다. 가짜뉴스 진원지인 극우 사이트와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된 글을 확인해 신고센터를 통해 삭제 조치했으며 반복적으

로 왜곡 글을 확산한 유포자 등을 고소·고발했다. 편향에 대응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5·18 악의적 왜곡·편향, 왜 계속되는가' 토론회에서는 그해 6-8월 3개월 동안 5·18 보도 72건에 댓글 6595개가 게시됐고 극우 언론 등에서 '가짜 유포자' 관련 보도를 하면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6월에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아이디 30건을 파악하고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이중 2명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12명의 신원이 특정돼 각 주소지 경찰

이 조사하고 있으며 16건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자 신원 확인도 지속하고 있다. 30건 중 10여건은 댓글을 가진 삭제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편향 몇 차례로 진화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며 "아이들은 언론 기사 보다는 유튜브에 나오는 잘못된 이야기를 믿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5·18 왜곡을 주도한 지만원씨가 구속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이버상에 글이 남아있었고 대응단이 발견해 사법조치를 의뢰했기 때문이다"며 "사이버상으로 유포되는 5·18 가짜뉴스 생선이 진화하는 만큼 대응도 강화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난감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봄맞이 준비하는 시민들 꽃샘추위가 풀리고 평년기온을 회복한 3일 서울 종로구 종로꽃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봄꽃을 살펴보고 있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이번주 첫 재판

송영길 사건, 준비기일 마치고 본격 공판 시작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재판부 교체로 기일이 밀렸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도 갱신 절차를 통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차 공판을 연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 까지 자신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에 따라 모금이 가능하든,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를 회피하고 먹사연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모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뇌물)하고,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눠준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송 전 대표 측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정치자금의 종류'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3조1호 바목의 해석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항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 송 전 대표 측은 조직 특성상 법인단체인 먹사연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후원금을 받을 당시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검찰이 뇌물로 판단한 4000만원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송 전 대표 측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유사 사건들에서 법인단체 역시 정치활동 주체로 인정된 판례가 있고, 2016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의 의미를 바꾸거나 축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구속된 송 전 대표 측은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오는 8일에는 재판부가 바뀌면서 기일이 밀렸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재개된다. 지난 1월19일 18차 공판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심리했던 증거와 재판 내용 등에 대한 파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재판은 당초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아 심리를 이어왔으나 그가 사직하면서 한성진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배석 판사들도 모두 변경됐다. 재판부가 마지막 공판에서 밝힌 것처럼 이날 공판 갱신 절차 진행 후 증인신문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배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국토부로부터 부지용도 상황 조정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는 등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故) 이재명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의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오는 4일 열린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관계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를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전 전 실장에게 면담 강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해 6월 1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특검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다. 김수권기자

경찰청 "오늘부터 화물차 정비 불량·과적행위 집중단속"

사고 다발지점 중심 중앙선 침범 등 단속



경찰청이 오늘부터 8주간 화물차의 정비 불량, 과적 행위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도

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오는 4일부터 4월30일까지 8주 동안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기 안성시 공도읍 경

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바퀴 1개가 빠지며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도에서 달리던 관광버스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갔고,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60대 탑승객 등 2명이 숨졌고 승객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화물차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아울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정비 불량 ▲과적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특별단속 및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화물차 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 운행 등을 교육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 산업도로의 주변 도로 상태를 확인해 보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 정비를 충실히 하고 줄리면 휴게소에서 쉬고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도로 시설물 충돌 사고

3·1절 연휴 중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다 도로 시설물 충돌 사고를 내고 귀가했다가 시민 신고로 밀미가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부경찰 금호지구대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일 오전 1시 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술집 앞에서 남구 봉선동 자택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운전 중이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검거 직후 경찰에 '지구대 동료들과 술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차량을 몰고 귀가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 운전자 신고로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서부경찰은 일단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A경위에 대한 수사는 내부 지침에 따라 소속 경찰관서인 서부경찰 대신 북부경찰이 맡는다. 오유나기자